

## 국회의원은 결단하라!

- 결단① 반전평화를 위한 이라크 추가 파병안 반대
- 결단② 정치부패 척결 및 정치관계법 전면개정
- 결단③ 분권,균형,행정수도 등 지방살리기 3대입법안 제정
- 결단④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제정
- 결단⑤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안개정
- 결단⑥ 도박산업 관련 관광진흥법 개정 반대

## 개혁입법 촉구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혁입법 촉구를 위한 지역구 국회의원 맨투맨 밀착감시행동 돌입-

일 시 : 2003년 10월 2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대전YMCA 4층 세미나실

주 최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대전정치개혁시민연대 /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 개혁입법 촉구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혁입법 촉구를 위한 지역구 국회의원 맨투맨 밀착감시행동 돌입-

##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충재(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운영위원장)

☐ 인사말

☐ 취지 및 경과보고

☐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개혁입법안 발표

☐ 개혁입법 촉구 지역구 국회의원 맨투맨 밀착감시행동 선언 및 향후 사업계획 소개

☐ 개혁입법 촉구 결의문 발표

☐ 질의 및 응답

## ■ 취지 및 경과보고

• 그동안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대전정치개혁시민연대,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에서는 정치관계법, 분권·균형발전·신행정수도 등 지방살리기 3대입법안, 지역신문발전지원법, 호주제폐지를위한 법안개정, 도박산업관련 관광진흥법 개정안 반대 등 개혁입법안 제개정 및 반전평화를 위한 이라크 파병 반대활동을 개별단체별로 전개해 왔음.

• 그러나 지난 40여년동안 누적되어온 정치부패 및 정경유착 등의 폐해로 인해 급기야 대통령 자신의 직위를 걸고 재신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재신임 정국에서 정치권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으로 인하여 이번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정치관계법 등 개혁입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다짐은 결국 공염불이 될 지경에 처해있음. 또한 국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이라크파병을 공식 발표하였으며, 최근 수도권과 경기권 등의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방살리기 3대입법안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발과 함께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지난 9월 22일, 대전지역 시민운동 진영은 '개혁입법실무대책회의'를 구성, 그동안 각각 추진해오던 개혁입법안에 대하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대전정치개혁시민연대,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가 합심하여 개혁입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는 한편, 시민의 힘으로 명분없는 이라크 파병을 막아낸다는 방침아래 대국회대응 총력전을 벌이기로 결의함.

• 한편 개혁입법실무대책회의는 전국정치개혁시민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호주제폐지를위한전국연대, 지역언론개혁연대, 이라크파병반대공대위, 도박장반대전국네트워크 등 전국조직과 긴밀히 연계, 개혁입법안 중 개별법안에 대한 대응활동을 위해 사안별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지역조직 결성을 지원해 옴.

### • 개혁입법실무대책회의 활동일지

9/16(화) 개혁입법실무대책회의 구성 합의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정개련,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개혁입법안 대국회 대응전략 논의

9/22(월) 개혁입법실무대책회의 결성 / 단체별로 활동가 1인씩을 파견, 9인으로 구성

- 대전정개련, 지방분권본부는 각 1인씩, 대전연대는 공동운영위원장단 소속단체에서 1인씩 파견

9/26(금) 이라크파병반대대전시민행동 결성 준비모임 합류

9/27(토) 국제반전공동행동의날, 이라크파병반대 대전역 집회 개최

9/29(월) 개혁입법실무대책회의 1차 회의 / 도박의 도시를 꿈꾸며 영상물 시사회 지원

10/ 6(월) 개혁입법실무대책회의 2차 회의 / 대전시 국감-경륜장 건설 반대 캠페인 전개

10/ 7(화) 신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충청권협의회 지원(3개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 서약식 체결)  
이라크파병반대대전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연대지원

10/11(토) 이라크파병반대 서명운동 및 거리캠페인 지원(사진전, 거리투표 등)

10/13(월) 개혁입법실무대책회의 3차 회의 / 호주제폐지법안 서명운동 단체별 취합

10/14(화) 신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방문(통합신당-김근태, 한나라당-최병렬, 민주당-홍재형)

10/17(금) 개혁입법실무대책회의 4차 회의 / 지방분권특별법 4개단체 합의안 발표 기자회견 지원

10/21(화) 개혁입법실무대책회의 5차 회의

10/22(수) 개혁입법 촉구를 위한 지역구 국회의원 맨투맨 밀착감시행동 선언 기자회견 개최

## ■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개혁입법안

•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개혁입법안의 핵심은 '정치부패 척결 및 정치관계법 전면개정', '지방분권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지방살리기 3대 법안 제정', '지역언론개혁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제정', '양성평등사회를 위한 호주제 폐지법안 개정', '도박산업을 양성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반대' 등의 5대 핵심과제와 향후 국회에 상정될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반대' 등이다. 이같은 내용의 사안별 6대 핵심과제를 더욱 세분화하여 발표한다.

• 개혁입법실무대책회의는 이와같은 개혁입법안 요구를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1차적으로 질의하는 한편 2004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도 2차 질의를 통해 그 수용여부 및 답변, 모니터링에 근거하여 향후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의 입장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2004년 총선에 현역 국회의원 및 출마예정자들에 대한 알권리 보장을 통해 유권자의 심판을 이끌어내는데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핵심과제>

1. 정당개혁
  - 국민참여형 경선 등의 상향식 후보선출 의무화(정당법 및 당헌내규 규정)
  - 비민주적 공천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경선불복 방지제도 마련
  -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 :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공천으로 실질적인 여성할당제 도입
2. 선거제도 개혁
  - 유권자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는 1인 2표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선거공영제 도입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기탁금 하향조정
  - 포괄적 사전선거운동 제한규정 폐지를 통한 후보자간 차별 철폐
  - 참정권 확대 :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및 시민단체의 유권자운동 자유 보장
3. 정치부패척결을 위한 정치자금제도 개혁
  -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시 단일계좌 사용 및 수표·카드 사용의무화
  -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 수입내역의 신고 및 공개의무화
  - 국고보조금 배분을 정당의 유효득표수로 조정
  -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
4. 국회기능의 활성화와 국회중심의 생산적 정치실현

### <지방살리기 3대 법안 제정을 위한 핵심과제>

1.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 4개 단체(시도지사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구의회회장단협,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합의안 반영

- 행정분권 : 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 개선
- 재정분권 :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 및 지방교부세 인상
- 정치분권 : 지방정치의 자율성 확보제도 개선(자치입법권·조직권 확대, 지자체의 국정참여 확충)  
주민참여제도의 도입과 확충(주민소환, 주민소송제 도입 등)

## 2. 지역(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 지방의 자율권과 참여를 보장,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의 재원 순증이 수반되는 법안 제정
- 지역금융산업 육성과 지역발전특별회계 설치
- 지방대학육성 및 지역할당제 도입
- 지방과학기술의 진흥과 지역혁신 촉진
- 지역언론 육성 및 지역문화·정보 활성화
- 중앙행정부서의 지방이전

## 3.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제정

- 여야정당의 당론 확정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 지방살리기 거시적 차원에서 3대 법안을 패키지로 하여 일괄 제정

### <호주제 폐지 법안 개정을 위한 핵심과제>

1.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 통과
2. 호주제 폐지 이후 민주적 가족제도에 대한 올바른 대안 모색

###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제정을 위한 핵심과제>

1. 지역언론 개혁과 지역신문 진흥을 위한 특별법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제정
2. 불공정행위 규제 : 무가지 규제강화, 전국지에 의한 독과점 신문시장 개선
3. 지역신문 지원정책의 수립 : 세제지원 및 지역신문의 경영투명성 확보
4. 지역발송 육성

### <도박산업 정비 및 관광진흥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핵심과제>

1. 대전지역 경륜장 건설 반대
2. 관광진흥법 개정안 반대
  - 성인오락실을 관광전자게임장으로 하여 호텔영업을 허가하는 내용
  - 국내 관광시설에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외국인 전용 카지노영업을 허가하는 내용

### <이라크 파병반대와 반전평화를 위한 핵심과제>

1.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거부
2. 미국의 이라크 점령반대 및 미국의 파병압력 반대
3. 미국의 한반도 전쟁위협 반대 및 한반도 평화수호

# ■ 개혁입법 추구를 위한 지역구 국회의원 맨투맨 밀착감시행동 선언 및 향후사업 소개

## 1. 취 지

### o 맨투맨 방식과 단체 전담제의 밀착감시행동

- 올 해 안에 정치부패척결 및 정치관계법 전면개정, 분권·지역균형발전·신행정수도 등 지방살리기 3대 법안 제정, 지역언론개혁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제정, 양성평등사회를 위한 호주제 폐지 법안 개정, 도박산업을 양성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반대 등 각 부문의 개혁입법안을 반드시 통과 시키는 한편, 이라크파병반대와 반전평화운동에 대한 대전지역 국회의원의 의견을 묻고 개혁입법안을 촉구하는 밀착감시행동을 전개한다.

### o 각 부문별 전국조직과의 공동행동과 온오프라인을 통한 광범위한 시민참여

- 전국정치개혁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호주제폐지를위한전국연대, 지역언론개혁연대, 이라크파병반대 공대위, 도박장반대전국네트워크 등 전국조직과 연대하여 개혁입법안 수용에 소극적이거나 거부하는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광범위한 시민참여그룹을 형성하고 적극적인 항의운동을 전개한다.

### o 2004 총선에서의 유권자 심판

- 개혁입법 과제에 대한 밀착감시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태도를 모니터하여 2004년 총선에서 유권자운동의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고, 끝까지 거부하는 국회의원에 한해서는 반드시 유권자심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004총선 출마예상자에 대해서도 질의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기로 한다)

## 2. 활동계획

### o 개혁입법실무대책회의 구성(~9월 22일)

- 1)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정치개혁시민연대,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에서 파견하는 실무자로 구성
- 2) 개혁입법실무대책회의 팀구성
  - 대전정치개혁연대 김수현(사무국장)
  - 지방분권대전본부 염대형(간사)
  - 대전여민회 임정규(부장)
  -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홍모(생태도시부장)
  - 대전참여자치연대 박상우(기획국장) ; 총괄팀장
  - 대전환경운동연합 문창기(기획사업팀장)

- 대전YMCA            오기자(시민문화팀장)
- 대전경실련        이현호(시민사업부장)
- 대전충남민언련   한상헌(간사)

o 맨투맨 밀착감시행동을 위한 국회의원별 전담마크 단체 구성(~10월 20일)

- 강창희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 김원웅 :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 박병석 :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여성환경포럼
- 송석찬 :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 이양희 : 대전경실련, 대전홍사단, 실업극복시민연대
- 이재선 : 대전여민회, 대전YMCA, 대전정치개혁시민연대

o 개혁입법 촉구를 위한 맨투맨 밀착감시행동 전개(10월 22일~11월 4일)

- 대전지역 국회의원에 대해 개혁입법안 수용여부에 대한 의견질의 및 답변접수
- 2004총선 출마예정자에 대해 개혁입법안에 대한 의견질의 및 답변접수
- 국회의원 전담마크 단체와의 간담회 추진
- 주요발언 및 언론기사 모니터링
- 의견질의 공개 및 모니터 결과 발표(11월 4일경)

o 개혁입법안 반대 의원 지구당 항의방문 및 규탄 총력캠페인 전개(11월 4일~11월 29일)

o 각 부문별 개혁입법안에 대한 연대활동 및 범시민행동 전개

■ 각 의원별 맨투맨 단체 전담자

(※표시 전국적 공동대응)

이름	정당	지역구	상임위(2003.10기준)	전담마크 단체
강창희	한나라당	대전 중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김원웅	개혁정당	대전 대덕구	환경노동	※녹색연합(박경조 공동대표)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박병석	통합신당	대전 서구갑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여성환경포럼
송석찬	통합신당	대전 유성구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이양희	한나라당	대전 동구		대전경실련      대전홍사단 실업극복시민연대
이재선	한나라당	대전 서구을		대전여민회      대전YMCA 대전정치개혁시민연대

(국회의원별 전담마크 단체에서는 대표급과 실무책임자급, 실무간사를 전담자로 선정한다)

## ■ 개혁입법 촉구 결의문

### 국회의원은 결단하라 !!!

정치권이 연일 말 뒤집기로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국민투표를 놓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던 여야 정당과 언론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대통령은 시민단체와 만나 어제 한 말을 뒤집고 파병을 졸속 결정했다. 파병을 하겠다는 대통령이나, 지긋지긋한 당리당락에만 얽매어 말씨름에만 급급하는 여야 정치인들 모두 과연 국민을 의식하고 나라의 안위를 생각조차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방살리기 3대 개혁입법을 대하는 정치권의 움직임 또한 우려와 걱정만을 안겨주는 마찬가지다. 노무현 대통령 주재 하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3대 개혁입법안이 통과됐지만 대부분의 여야 정치권의 눈에 도무지 무너지가는 지방이, 분권과 균형발전이 보이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정당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또한 제 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국민들까지 나서서 부당한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인과 기업의 자진 신고를 촉구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이며, 나아가 SK 비자금을 비롯, 재벌 기업의 비자금 수사에 비협조인 모습마저 내보이고 있는 실정에 있다.

우리는 현재를 온 국민의 힘을 동력으로 하여 개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또 다시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현재의 후진적 사회구조를 되풀이 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 비상한 시국이라 규정한다.

이에 우리는 정치개혁과 지방개혁을 실현하고 평화구축과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혁입법안에 대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단호한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결단 1. 정치부패 척결 및 정치관계법을 전면 개정하라!*

*결단 1. 지방분권 · 지역균형발전 · 신행정수도건설 등 지방살리기 3대입법안을 즉각 제정하라!*

*결단 1. 지역언론개혁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을 제정하라!*

*결단 1.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호주제 폐지법안을 즉각 개정하라!*

*결단 1. 도박산업을 육성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결단 1. 명분없는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을 전면 거부하라!*

우리는 이같은 개혁입법안이 한국사회의 근본적 혁신을 꾀하는 기틀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에 따라 이번 16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헌정사에 길이 빛나고 기억되는 개혁입법의 장이 되도록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위해 우선 각 단체의 대표자와 실무책임자, 활동가들이 지역 국회의원들 한사람 한사람씩을 밀착 담당 하여 법개정 수용을 관철시킬 것이다. 이는 더 이상 이런저런 이유로 소신을 숨기고 굽히며 엉거주춤 하는 지역 시민의 대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이고 선언이다. 국민의 대표답게 당론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개인의 소신과 판단을 밝히려는 주문이며 그렇게 하도록 반드시 강제해 낼 것이다. 나아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개혁입법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태도를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 운동의 주요근거로 삼을 것임도 분명히 밝히는 바다.

이제 더 이상 말뿐인 개혁은 필요없다. 작금에 국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여야 정치권 모두가 실천으로 개혁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 뿐이다. 우리는 거듭 정치권이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개혁열망에 귀기울이고 눈높이를 맞출 것을 촉구하고 호소하는 바이다.

2003. 10. 23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정치개혁시민연대,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